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76
----------	------

제출연월일 : 2020. 6. .

제 출 자 : 하남시장

1. 민간위탁의 목적

감일스윗시티8단지 내에 설치예정인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시설의 관리·운영 등)
-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시설현황

- 시 설 명 :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 단지현황

단지명	위치	관리세대(호)	입주지정 기간	사회복지관 규모(㎡)	비고
감일스윗시티 8단지 (감일A3BL)	하남시 감일순환로 95-3	국민임대(613호) 영구임대(475호) 총 1,088호	2020.09.21. ~11.20. (60일간)	지하 1층 454.78㎡ 지상 1층 601.33㎡ 총 1,056.11㎡	

※ 주민공동생활 건물(305동)

－ 건축 진행 현황 : 준공 예정(2020.07.13.)

○ 시설규모 : 지하1층 ~ 지상1층

(단위:㎡)

층수	시설물 용도	세부내역	연면적(㎡)			비고
			계	전용	공용면적	
합계			1,056.11	821.79	234.32	
지상 1층	사회복지시설	관장실(8.14),사무실(36.82) 프로그램실(113.1), 치료실(100.64),상담실(25.49),식 당,주방(67.36),강당(73.66) 기타(10.20)	601.33	435.41	165.92	
지하 1층	“	프로그램실(135.95),창고(9.78)강 당(224.27),기타 (16.38)	454.78	386.38	68.4	

다. 사업내용 :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 개관준비팀 구성 및 운영
 - 타기관 벤치마킹 등 개관준비 철저
- 개관까지 내부시설 보강공사 및 집기 등 구입
- 조직 및 인력 구성 및 관리
- 주요사업 내용
 - 가족복지사업
 - 지역사회보호사업
 - 교육문화 사업
 - 자활지원 등 기타사업
 - 사례관리(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지역조직화(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등

라.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5년
- 위탁업무 :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준비 및 주요사업 운영
- 소요예산 : 시비668,000천원(2020년)
 -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내부시설 보강공사 : 488,000천원
 -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집기 및 자산취득 : 100,000천원
 -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준비팀 인건비 및 운영비: 80,000천원

마.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정 규모를 부담할 수 있는 법인
- 신청제외 대상(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 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민간위탁 필요성
 -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준비 및 운영사무는 사회복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융통성 있는 운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대효과
 -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 선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남시 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3. 관련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38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1. 미성년자
 -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제목개정 2011. 8. 4.]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8. 12. 11., 2019. 1. 15.>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부칙<제16738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3.] [보건복지부령 제699호, 2020. 1.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칙, 사회복지사 자격 등) 044-202-302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4.10.08 조례 제 747호

(일부개정) 2006.01.06 조례 제794호

(전부개정) 2015.10.05 조례 제1309호 (제명 포함)

(일부개정) 2017.10.13 조례 제1486호

(일부개정) 2018.12.27 조례 제16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하남시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하남시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회복지관의 사업)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 증진, 가족기능 보완, 가정문제의 해결 및 치료, 부양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등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경제·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사업 등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네트 구축, 주민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조직 사업 등
4. 교육·문화사업 : 아동·청소년 평생교육, 성인기능교실, 어르신 여가문화, 문화복지 사업 등
5. 자립지원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6. 그 밖의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 등

제4조(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사회복지관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개정 2017.10.13>

③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위탁기간)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준) ① 사회복지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삭제<2017.10.13>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은 규칙 제2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 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과 시장이 별도 사업을 지정·운영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증설을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0.13>
-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 제34조제5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위탁·수탁 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7.10.13>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 또는 재위탁 계약을 하는 사회복지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제1486호,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2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정) 2001.04.16 조례 제609호

(전부개정) 2019.10.01 조례 제17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하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

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하남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

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④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탁기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 한도액,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재계약) ①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할 것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할 것
3.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4.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6.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인계·인수) 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5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물품 등의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수탁협약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0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관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16호, 2019.1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